

현안과 과제

- | 취약계층,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 최근 서민금융의 문제점과 과제

1. 가계부채 현황

국내 가계부채는 2011년말 913조원(자영업자 포함 1,071조원) 규모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은행 대출 위주의 저소득층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삶의 질 저하,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문제점

첫째,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대출에 소극적이다.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의 높은 연체율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서민금융의 실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말 기준 서민금융상품 지원 총 누적액은 4.9조원이며, 대부업체의 2011년 상반기 공식 집계 대출액은 8.6조원이다. 특히 불법 사채 이용액(30조원 이상 추정)까지 더하면 서민금융의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저소득층의 부채증가율은 2010~11년 5.5%인데 반해 소득은 오히려 -9.7%로 감소하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넷째, 대출이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부채를 통한 자립 기반 형성이 어렵다. 저소득층은 생활비 등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비중은 23.2%, 신용대출은 75.6%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 저하에 기인한 가계대출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신용도 하락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다섯째, 연체율 증가로 인한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금리 및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대부업체의 연체율 급등, 채권추심업체의 공격적 영업 등을 예상할 때 더욱 어려운 모습이다.

3. 과제

생활지원 자금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의 지원 범위 및 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또한 고용 및 자산형성 연계 대출 등 취약계층이 금융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소비자 금융시장의 명확한 분류 및 저신용자 관련 신용평가 체계의 정비, 금융 계열 저축은행 등을 활용한 채널 확장이 요구된다.

1. 가계부채 현황

-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로 삶의 기반 붕괴, 불법 채권 추심 등 각종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서민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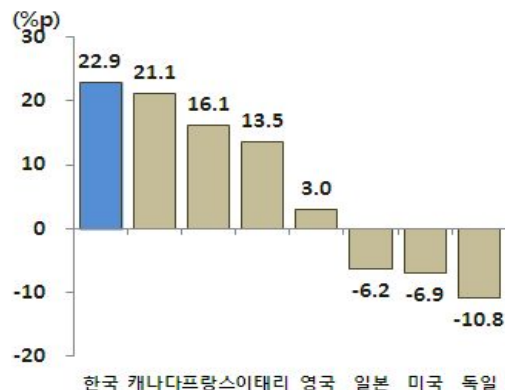
○ 가계부채 동향

- 국내 가계부채는 연평균 10%에 가까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말 913조원을 기록1)
 - 실질적 가계부채로 평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약 158조원)을 포함 시 전체 가계부채는 2011년말 약 1,071조원으로 추정
- 소득보다 부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OECD 주요국에 비해 가계 부채의 상대적 크기가 급격히 확대
 - 2005~2011년 사이 국내 가계부채는 연평균 9.0%로 증가한 반면 개인가처분소득은 5.1%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
 - 한국은 2005~2010년 사이 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 비중은 22.9%p 증가 하여 주요국에 비해서도 매우 빠르게 증가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 변화>



자료: 한국은행, OECD Economic Outlook.

주: 1) 이태리, 일본은 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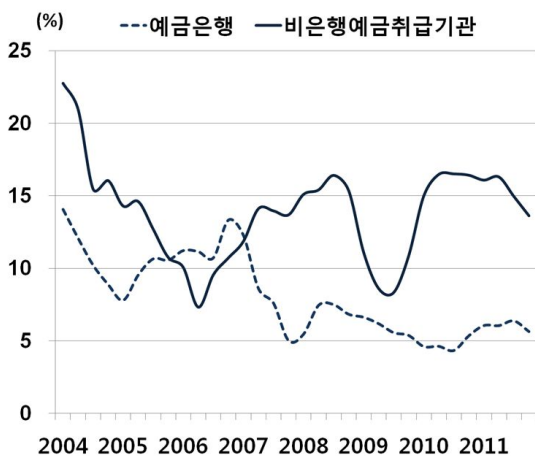
2) 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 변동폭은 2005년 대비 2010년 기준.

1)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카드사 등의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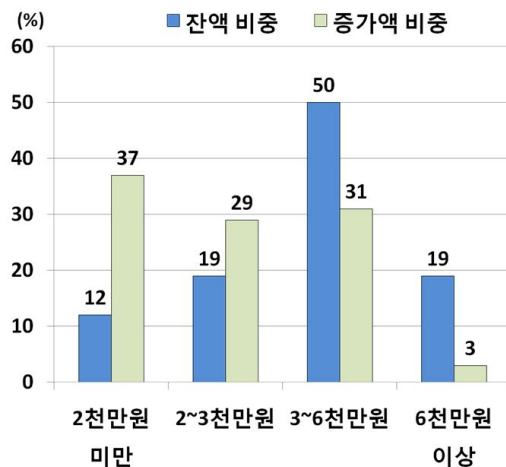
○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

-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이 빠르게 증가
 - 2008~2011년 예금은행의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5.5%이나 동기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연평균 13.6%로 증가²⁾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및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에 대출이 공급됨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며, 높은 금리로 인해 주 이용층인 서민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³⁾
- 특히 저소득 및 저신용 계층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대출잔액 비중은 2011년 상반기 전체 가계대출의 약 12% 수준
 - 그러나 2010~2011년 상반기 대출증가액 중 37%를 차지해 다른 계층에 비해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남

<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



<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액 비중 >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주: 잔액은 2011년 상반기, 증가액은 2010~2011년 상반기 사이 증가액 중 비중을 의미.

- 2) 2008~2011년 사이 금융기관별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상호저축은행 13.8%, 신용협동조합 18.9%, 상호금융 11.5%, 새마을금고 21.5% 등임
- 3) 은행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의 경우 동일 신용등급 차주일 경우라도 비은행권의 대출금리 (24.4%)가 은행(9.8%)보다 평균 2.5배 정도 높음(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문제점

○ 첫째,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서민금융 대출과 저신용자의 이용 제한

- 주요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의 높은 연체 위험 부담으로 일선 금융기관들은 소극적인 대출 경향

- 새희망홀씨: 일반은행에서 신용등급 5~10등급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며, 2011년 12월 기준 연체율은 1.7%(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6%)
- 햇살론: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 6~10등급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며, 연체율은 2012년 4월 현재 7% 수준에 육박
- 미소금융: 은행 및 기업 등이 신용등급 7~10등급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며, 은행 산하 미소금융재단의 2011년 10월 기준 연체율은 3.9%

- 서민금융의 대상 자격 제한, 금융기관의 저신용자 대출 기피 등으로 저신용자는 서민금융 이용 역시 어려운 상황

- 대상자격 제한: 햇살론이 출범한 2010년 7월 이후 10월까지 신용등급 9, 10등급 수요자의 상당수는 장기연체 등의 자격 제한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금융기관의 기피: 금융기관들이 정부정책에 따라 서민금융 대출 규모를 확대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을 기피한다는 의견이 제기
- 실태 파악의 미흡: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별 서민금융 대출 규모 파악 등이 부족하여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의 실효성 검증에 어려움이 가중

< 서민금융 신용대출 지원 내용 >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지원 대상	5~10등급 연소득 ~3,000만원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7~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담당 기관	일반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미소금융 재단 등
용도	생계자금	생계·사업자금	사업자금
대출 한도	2,000만원	용도별 1,000 ~5,000만원	용도별 500 ~5,000만원
금리	11~14%	10~13% +보험료 1%	2~4.5%

자료: 금융위원회.

< 2010년 햇살론 등급별 대출 실적 >



자료: 금융위원회.

주: 2010년 7~10월 기준.

○ 둘째, 서민금융 수급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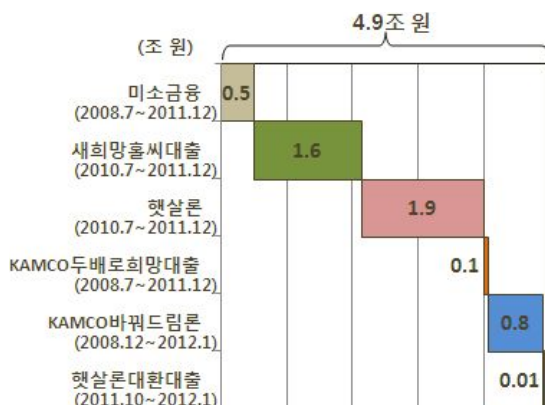
- 서민금융 지원액 규모는 실제 수요에 비해 상당량 부족한 것으로 추정

- 서민금융 지원 규모: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신용대출, 신용보증, 대환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의 총 지원 누적액은 4조 9,049억 원
- 대부업체 대출액: 서민계층 및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공식 집계 대출액은 8조 6,361억 원(2011년 6월 기준), 사채는 30조원 이상 추정
- 서민금융 수급불일치: 저축은행, 불법 사채 등의 이용액까지 더할 경우 서민금융의 실제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서민 금융의 공급 부족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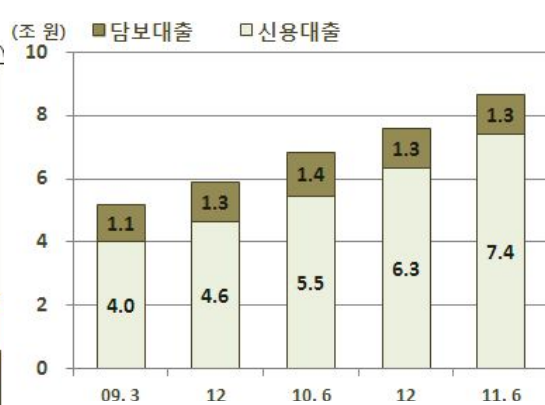
- 서민금융 수급 간 미스매치 심화와 경기 침체 지속이 동시 진행될 경우 자영업자 등 저소득 가계의 급격한 악화도 가능

- 대출 증가 추세의 둔화: 특히 금융기관들의 소극적인 서민금융 대출과 더불어 대출 심사 기준 강화 등으로 수급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
- 자영업자의 대부업 대출 증가: 자영업자들의 대출 비중이 증가 추세('09년 하반기 18.9%→'10 상반기 20.9%→'10년 하반기 21.2%→'11 상반기 21.7%)⁴⁾
- 저소득 자영업 가계의 붕괴 가능성: 이는 서민금융의 수급 간 미스매치가 심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에 의한 가계 붕괴도 가능함을 의미

< 서민금융 지원 규모(누적) > < 2011년 상반기 대부업체 대출액 >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금융감독원.

4) 2009년 상반기는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 대부업체, 이후는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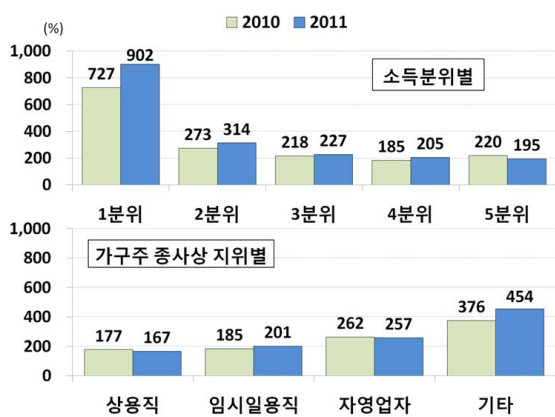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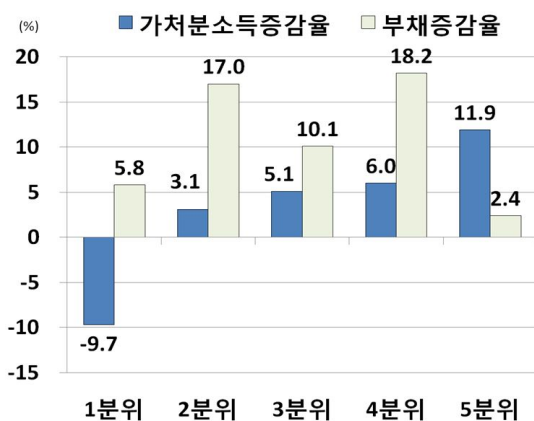
○ 셋째,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가계부채의 상대적 규모가 더욱 큰 모습

-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 증가율은 높지 않지만 소득 감소율이 높아서 삶의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임
 -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평균 부채는 5.8%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부채 증가율이 큰 모습임
 - 2~5분위는 부채 증가, 소득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짐
- 소득 수준별로는 1분위가, 직종별로는 자영업자 및 기타 가구 등 수입이 불안정한 구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
 - 부채를 보유한 1분위 가구의 총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10년 727%에서 2011년 902%로 빠르게 증가함
 -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총부채/가처분소득 비중은 2010년 262%에서 2011년 25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소득이 불분명한 기타 가구는 2010년 376%에서 2011년 454%로 급증함

<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및 가처분소득 변화(2010~2011년) >

(가구당 평균 부채 및 가처분소득 증감)

(부채보유 가구의 부채/가처분소득)



자료: 금융감독원.

주: 1) 부채는 전체 가구의 평균이 아니라 부채보유 가구의 평균치
 2) 가처분소득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평균치.

○ **넷째, 대출이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부채를 통한 자립 기반 형성이 어려운 상황**

- 저소득층 가구는 생활비 및 기타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비율이 높음
 - (담보대출) 소득 1분위 가구가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비중은 23.2%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보유 자산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신용대출) 또한 소득 1분위 가구가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비중은 무려 7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개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 소득 저하에 기인한 가계대출은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신용도 하락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생활비, 의료비 등 긴급한 이유로 상환능력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급격한 부채의 증가 및 신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득 5분위별 가계대출의 용도 >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담보 대출	거주주택 마련	26.4	34.2	40.9	37.5	33.2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10.2	26.9	11.4	21.6	23.5
	전(월)세 보증금 마련	9.4	4.8	6.2	4.9	2.4
	부채 상환	4.9	3.5	7.4	3.1	1.2
	사업자금	25.8	17.6	23.3	23.1	34.9
	생활비	12.0	3.9	4.2	3.6	1.1
	기타	11.2	9.0	6.6	6.1	3.6
신용 대출	거주주택 마련	2.1	3.6	15.6	7.9	8.0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	0.4	1.1	1.1	4.7	8.1
	전(월)세 보증금 마련	1.6	7.2	10.4	8.6	6.1
	부채 상환	4.2	4.7	9.1	7.0	5.1
	사업자금	16.1	40.0	32.9	34.1	32.4
	생활비	11.4	20.2	18.4	19.9	13.9
	기타	64.2	23.2	12.6	17.9	26.2

자료: 금융감독원.

○ 다섯째,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은 비제도권 및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 저소득 계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담보대출보다 고금리의 신용대출 비중이 높음

- 소득 1분위 가구의 가계대출은 79.8%가 기타 비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업 거래자 수도 2009년 130만명 → 2010년 221만명 → 2011년 247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또한 소득 1분위 가구의 신용대출 비중은 26.7%로 다른 분위 가구에 비해 매우 높음(2분위 15.9%, 3분위 13.1%, 4분위 10.9%, 5분위 9.5%)⁵⁾

- 대부업체의 연체액 급등 등 서민 가계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업체의 실적악화로 인한 공격적 영업이 예상돼 향후 서민 가계의 추심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대출 연체액은 2011년 1월 4,010억원에서 2012년 1월 6,098억원으로 1년 사이에 52.1% 증가함 (연체율도 같은 기간에 8.9%에서 12.4%로 3.5%p 증가)
- 국내 채권추심회사들의 영업수익은 추심수수료율 하락('10년 6.3%→'11년 6.0%) 등으로 지난 3년간 정체 상태를 지속
 - * 국내 채권추심회사는 총 23개사로 연간 수입 채권은 약 20조원 규모
 - * 채권추심회사 영업수익 : '09년 6,849억원, '10년 6,899억원, '11년 6,892억원

< 소득별 대출기관 이용 비중(신용대출) >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은행	9.7	34.4	36.3	52.9	63.4
제2금융	10.4	29.3	35.7	26.2	22.4
기타	79.8	36.4	28.0	20.9	14.1

< 상위 10대 대부업체 연체율 >
(단위 : 억원)

구분	2011. 1	2012. 1	증가율
대출잔액	44,861	49,215	9.7%
연체액	4,010	6,098	52.1%
연체율	8.9%	12.4%	3.5%p

자료: 금융감독원.

주: 제 2금융은 저축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이며, 기타는 증권사, 직장, 공제회, 개인대부업체 등임.

5) 1분위 가구의 평균 신용카드 관련 대출액 수준도 1,119만원으로 2분위(665만원), 3분위(572만원), 4분위(493만원), 5분위(764만원)에 비해 높은 편임

3. 과제

- (단기 현안) 생활지원 자금,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의 강화
 - 경기 침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장기적인 소득 창출 방안 마련도 중요하나 단기적인 생활 자금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
 - 특히 가게 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자금 조달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일본의 국민생활사업부는 소규모 자영업, 생활위생,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 관련 대출을 진행하며, 대지진 등 재해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도 수행

- (중장기 과제) 고용 및 자산형성 연계 대출 확대 등 서민의 금융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
 -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연계 대출과 같이 저소득 및 저신용자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소득창출과 연계된 대출을 확대할 필요
 - 또한 서울희망플러스 통상, 희망키움통장 등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가계의 건전화를 유도

- (금융기관 관련) 저신용자의 신용평가 체계 정비 및 서민금융 확대
 - 신용등급이 높은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 시장과 저신용 금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시장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
 - 더불어 일반 은행 등의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 대한 별도의 신용평가 체계 수립을 통한 상환 리스크 관리가 요구
 - 자금 조성에 유리한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계열 저축은행⁶⁾ 등을 통해 서민금융 사업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특정 인센티브 제공 **HRI**

【총괄】	백홍기	수석연구위원	(hkback@hri.co.kr, 2072-6228)
【작성】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2072-6237)
	김필수	선임연구위원	(pskim@hri.co.kr, 2072-6238)
	조규림	연구위원	(jogyurim@hri.co.kr, 2072-6240)

6) 미소금융은 대기업 자본 및 은행의 휴면 계좌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기반을 두고 운용되고 있어 기존의 은행 및 증권사 계열의 저축은행들이 자금 조성에 보다 유리.